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사업,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설계·감리·측량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 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3. 일반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국·도비 보조사업
4.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결과 평가)**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 관리)**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물, 제14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lt;제1면&gt;

#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 ○○○사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 개요	<p>○ 용역명 :</p> <p>○ 용역기간 :</p> <p>○ 용역구분 : <input type="checkbox"/> 기술용역    <input type="checkbox"/> 학술용역    <input type="checkbox"/> 일반용역</p>												
용역 사업비	<p>○ 용역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99 533 1332 698"> <tr> <td>계</td><td>국비</td><td>도비</td><td>시비</td><td>지방채</td><td>기타(민자)</td></tr> <tr>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p>○ 예산편성 요구 시기 : ○○○○년 제○회 추경</p> <p>○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p> <p>○ 예산과목 :</p>	계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기타(민자)						
계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기타(민자)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p>○ 계약방법 :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p> <p>※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p> <p>○ 수행방식 : <input type="checkbox"/> 위탁형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 자문형</p>												
기존 용역과 유사중 복성	<p>○ 유사·중복성 여부 :</p> <p>○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p>												
용역 실명제	<table border="1"> <tr> <td>○○○국장</td><td>○○과장</td><td>○○계장</td><td>주무관</td></tr> <tr> <td> </td><td> </td><td> </td><td> </td></tr> </table>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lt;제3면&gt;

## 용역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의 주요 내용☐☐☐☐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법☐☐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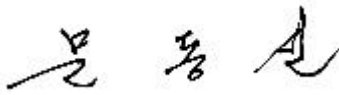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 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및 활용실적			
기대효과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군산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3.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

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 의사일정 제8항 :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②구청장은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②시장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66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법제13조의3제2항”을 “법제13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호”를 “제4호”로, “사람으로써”를 “자로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회장”으로 “15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 해촉, 회의운영, 협의회 업무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사항대로 한다. 또한 회원중 여성회원의 참여율을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제3항의 1호~9호를 삭제하고 제4항~제10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

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을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를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하며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또한 위원중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같은 조 제4항 “유통담당국장”을 “유통담당과장”으로 한다. 같은조 제5항 “유통담당과장”을 “유통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호에서 “1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조 제2호에서 “제1항1의 2호”를 “제1항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호에서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2항 “7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한다. 동조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부칙(2011.01.03 조례 제970호) 제2항 중 “제6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과 같은 법 제13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산시 실정에 적정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 제13조 의3-----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법 제2조제4호-----.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제4호----- -----자로서-----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 ----- -----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 9 명 이내-----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유통업 관련 업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 해촉, 회의운영, 협의회 업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3. 지역내 대학에서 유통관련 전공 대학교수
4. 지역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5. 지역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6.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7.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8.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 과장이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이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⑧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무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사항대로 한다. 또한 회원중 여성회원의 참여율을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삭 제>

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0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삭 제>

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준대규모점포-----  
-----  
-----  
-----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  
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  
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  
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  
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  
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2. (생 략)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  
업개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  
을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  
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  
간의 제한 등) -----  
-----  
-----  
-----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  
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  
-----  
-----55퍼센트-----  
-----.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장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위원은 유통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1. 법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른 분쟁

2. 법 제36조 제1항1의 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쟁  
제15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전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부 칙(2011.01.03 조례 제9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6조제7호·제8호,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 ④. (생략)

<신 설>

②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③ ----- 위원중 에서 호선하고-----

----- . 또한 위원중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유통담당과장 -----.

⑤ -----

----- 유통담당 공무원 ----- .

제14조(기능) ----- .

1. ----- 제1호-----

2. -----제1항 제2호-----

3. -----제3호-----

제15조(위원회의 임기) -----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  
-----.

② -----  
-----

-----5일 전까지-----  
-----.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부 칙(2011.01.03 조례 제970호)

① (시행일) -----.

② (유효기간) <삭제>-----  
-----

③. ~ 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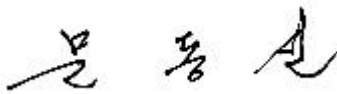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67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어업인은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린 대내외적 경쟁력이 유망한 고소득 사업의 개발 육성·지원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2. 도시와 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어업의 육성시책
4.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산인, 어업인, 도서민, 어업경영체, 생



산자단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및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를 왕복하는 선사 또는 내항여객선이 없는 도서의 도선사업자 및 이용승객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존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어촌경관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어업기반 조성사업
3.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6.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생산 및 공급 사업
3. 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수산물의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5.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및 유통 개선사업
6. 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7.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소형어선장비지원사업, 어업기계임대사업 등 어업기계화 촉진 및 어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8. 종묘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정보습득을 위한 정보지 보급사업 포함)
9. 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사업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일부 지원사업
11. 어업인(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어업인·단체 등의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12. 깨끗한 바다 가꾸기, 해양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수중정화 및 주변청소)
13. 그 밖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어촌의 지역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어촌의 교류확대 및 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7. 어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8. 어촌 전통민속 문화자원 개발지원 및 풍어제 및 향포구제 민간행사지원사업
9. 내항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지역 도선 관련사업 및 원거리 도서 여객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어촌 지역개발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미래 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어업 경영인이 어촌에 정착 및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 벤처어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어·귀촌인의 어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귀어 정착을 위한 주택의 수리비, 구입, 신축 및 창업자금 지원
3.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귀어세대 영어 정착금 지원
4.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5. 귀어·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마을조성 사업
6. 귀어·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7. 귀어·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8. 귀어·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
9. 귀어·귀촌인의 창조어업에 대한 지원
10. 귀어·귀촌인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 지원
11. 그밖에 귀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창업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산시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시장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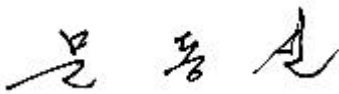
### ○ 의사일정 제7항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수정안
제13조(사업 결정)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13조(사업 결정) ① · ② (요구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군산시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산 업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68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로 일부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대상 및 지급액) ① <u>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u>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 3.(생략)	제3조(지원 대상 및 지급액) ① <u>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u>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 3.(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69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산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거주자로 한다.”를 “군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거주자로 한다.”로 일부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 ----- 군산시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거주자로 한다.----- 1. ~ 3.(생략)	제3조(지원대상) ----- ----- 군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거주자로 한다.---- ----- 1. ~ 3.(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0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 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 시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 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1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계획
3.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
4. 추진 사업 목록
5. 재원의 조달방법
6.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 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홍보한다.

1. 시홈페이지, 열린시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에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자치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

4. 시의회의원 1명

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

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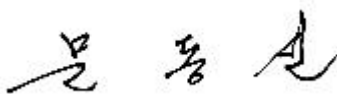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2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3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미만 : 15퍼센트
  - 나. 6개월분 이상 : 20퍼센트
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 : 2시간 무료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

## 붙임 2 &lt;신·구조문대비표&gt;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4.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 : 2시간 무료</u>
<신설>	<u>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u>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 &lt;변경 전&gt;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lt;변경 후&gt;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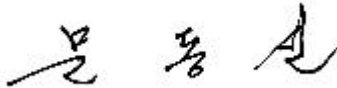
**붙임 3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삭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 1항제2호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중 많은 대수 적용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4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의”를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이론 학습과 현장 체험을 병행하여 교통 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교통·생활·재난·해상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 및 체험”으로,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안전체험관은 군산시 동장산로 135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를 “안전체험관에는 어린이들에게 체험과”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생활·재난·해상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버스 등 교통조형물, PDP”를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신호기”를 “교통신호기, 해상안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안전”을 “교통·생활·재난·해상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통교육”을 “교통·생활·재난·해상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통안전”을 “교통·생활·재난·해상안전안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

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교통공원의"를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공원"을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교통공원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변경 전>

○ 교통공원 이용료

<변경 후>

○ 안전체험관 이용료

[별지] 어린이교통공원위탁운영신청서

<변경 전>

○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변경 후>

○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위탁운영 신청서

○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u>이론 학습과 현장 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u> 군산시 어린이 <u>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교통공원은 군산시 소룡동 1630번지에 둔다.</p> <p>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u>교통안전교육</u>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내교육장 : 버스 등 교통조형물, PDP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실 등</li> <li>2. 실외교육관 : 도로 및 철도 건널목 안전교육, 버스 승하차 교육, 자전거 운전 연습장, 도로상에서 놀이시 주의사항 교육,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u>교통신호기</u> 교육 등</li> <li>3. (생략)</li> </ol> <p>제4조(업무)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 <u>교통안전</u> 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3. (생략)</li> <li>4. 어린이 <u>교통교육</u> 홍보</li> <li>5. <u>교통안전</u>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li> <li>6. 7. (생략)</li> </ol> <p>제6조(이용료) ①<u>교통공원</u>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u>교통공원</u>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p>	<p><u>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교통안전법</u>」 제23조 및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66조의2 ----- <u>교통·생활·재난·해상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 및 체험</u>----- <u>안전체험관</u> (이하 "<u>안전체험관</u>")-----</p> <p>제2조(위치) 안전체험관은 군산시 동장산로 135에 둔다.</p> <p>제3조(시설) <u>안전체험관</u>에는 어린이들에게 <u>체험과</u> ----- <u>교통·생활·재난·해양안전교육</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u>, -----</li> <li>2.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업무) <u>안전체험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교통·생활·재난·해양안전</u> --</li> <li>2. 3. (현행과 같음)</li> <li>4. ----- <u>교통·생활·재난·해양안전교육</u> --</li> <li>5. <u>교통·생활·재난·해양안전안전</u>-----</li> <li>6. 7. (현행과 같음)</li> </ol> <p>제6조(이용료) ①<u>안전체험관</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장료 면제) -----</p> <p>----- <u>안전체험관</u>-----.</p>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9조(위탁운영) ①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교통공원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교통공원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①수탁자는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등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  
-----  
-----  
----- 안전체험관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①안전체험관-----  
-----  
-----  
-----.

② (현행과 같음)

③안전체험관-----  
-----.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체험관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①----- 안전체험관 -----  
-----.  
-----.

②-----  
----- 안전체험관 -----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체험관 -----  
-----  
-----.

③----- 안전체험관 -----  
-----.

## ④·⑤ (생략)

⑥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  
때,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  
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⑦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  
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  
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  
여 교통공원의 운영을지도·감독하여, 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2. (생략)

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  
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4. (생략)

## ② (생략)

③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  
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 기타 집기는 군산시에 기부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  
원의 시설 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만한 운  
영과 이용객의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  
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체험관 -----  
----- 안  
전체험관 -----  
-----.

⑦-----  
----- 안전체험관 -----  
-----  
-----  
-----.

제12조(지도·감독) ①-----  
- 안전체험관-----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안전체험관 -----  
-----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체험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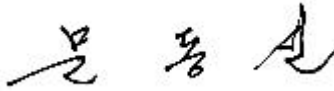
제14조(손해배상) -----  
----- 안전체험  
관 -----  
-----  
-----.

제15조(자원봉사자) ----- 안전체험관 -----  
-----  
-----  
-----.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5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군산시 및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6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의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2.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체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15조에 따른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분야별 지원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제조, 수확, 생산비 등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 후계인력양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 사업
5.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창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기자재·시험연구 등의 지원사업
7.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
10.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3.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4.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
5.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6. 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복합화를 위한 사업
7.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참석보상 및 컨설팅, 현장포럼 지원사업
8.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교육훈련 등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한 사업
9. 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장 등 시설지원 사업
10. 원예생산기반구축 지원
11.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2.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장비, 기자재 등 지원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말 산업육성을 위한 사육 기반시설 및 장비,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
1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8.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19. 가축분뇨처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20. 새로운 작목도입,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1.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소득작목 육성 및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2.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23.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기자재, 시험연구 및 컨설팅 지원사업
24. 농업인대학 행사운영비 지원
2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6. 전통식품산업체 육성에 관한 지원
27.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3.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4. 사고, 질병, 출산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어메니티개발사업 및 농촌전통문화 자원 발굴 사업
10. 농업인들의 식생활교육 지원
11.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 농업관련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4. 농특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전자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5.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시·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6.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교육지원청 및 일선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3. 농촌자원 활용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축제 및 행사 지원
4. 그 밖에 도농교류협력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장개척 및 도시간 교류판매 증진)** 시장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자매도시 및 기업체 판촉 활동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2. 농특산물의 자매도시 교환 판매행사에 필요한 물류비 등 경비 지원사업
3.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도시 등 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사업

**제14조(농산물 유통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시장은 생산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농특산물 판매 공동상표 개발 및 연구 사업
4. 생산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5.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6.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7. 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브랜드 강화 마케팅 지원사업



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축산식품사업 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 1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조문대비표

### ○ 의사일정 제1항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수정안
<신 설>	<b>제7조(관리감독)</b>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77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군산시장 



###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제4조(행사의 위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정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2. 친환경농업 육성부문
3. 원예·특작부문
4. 축산부문

5.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2명 또는 2단체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중앙 및 전라북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 - 1610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기준 마련(안 제4조)
-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063-454-3384, FAX:452-8165)
  - 전자우편 : sizuca@korea.kr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063-454-338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